

현대차그룹, 불법 파견 범죄행위 대표 집단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부당전보 맞서 출근 투쟁 ... “계열사 불법 파견 그룹이 해결하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조합원들이 8월 10일부터 부당 전보 철회와 불법 파견 소송 취하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공장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위아는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모두 울산공장으로 발령했다. 현대위아는 불법 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의 대화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금속노조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8월 12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앞에서 ‘불법 파견 소송 포기-자회사 강제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계열사 현대위아의 불법 파견 범죄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있다며 그룹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에 ▲불법 파견 사과와 자회사 입사 철회 ▲울산공장 부당 전보 철회 ▲법원 판결대로 직접 고용 이행 ▲민주노조 파괴,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현대위아 원청은 지회가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패하자,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자회사로 가라고 통보했다. 자회사로 가면 한 사람당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지회는 원청의 부당 노동행위를 거부하고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원청과 사측은 지난 5월 18일 평택 2공장 노동자들을 울산공장으로 강제 발령했다. 이어 평택 1공장 노동자들도 8



월 10일 자로 울산공장으로 강제 전보 조치 당했다.

8월 10일 지회 조합원들이 울산공장 발령을 거부하고 평택공장으로 출근하려 하자 사측은 용역과 경찰을 동원해 출입을 막았다.

엄강민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현대차그룹이 초일류 기업이 되려면 무엇보다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불법을 불법으로 막는 불법행위”

엄강민 부위원장은 “현대차에서 30년 근무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일류기업이 된 현대차그룹이 부끄럽다”라며 “은퇴한 현대차 노동자들이 자랑스러운 회사로 기억하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고 촉구했다.

구현수 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투쟁 경과를 보고하며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위아 불법 파견 범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회는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이상권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자회사 입사 강요와 울산공장 발령에 관해 “불법을 불법으로 돌려막는 불법행위이다”라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이상권 노무사는 “불법 파견 간접고용은 중간착취를 금지한 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한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소송은 재판 청구권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권 노무사는 “현대위아 원청과 사측은 자회사로 가면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현대위아가 원청 사용직임을 스스로 인정한 행위이다”라고 꼬집었다.

현대위아 평택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하청업체 폐업으로 해고와 고용불안에 고통받아 왔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2013년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이듬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고용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지회를 손을 들어 주었지만, 사측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3천만 원 받고 자회사로 옮기라는 꼼수를 들고나왔다.

사측은 불법 파견 소송을 취하와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연고가 없는 울산 공장으로 강제 발령하며 정규직 전환 투쟁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지회는 87일째 공장 안에서 농성을 벌이며 싸우고 있다.

“정찬희 동지 복직할 때까지 싸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파업 결의대회 열어 ... “반노조 행위중단·열사 사과·복직이 삼성의 진정한 사과”

“노조파괴 희생자들은 삼성에게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찬희 동지는 여전히 하고 상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말뿐인 사과,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까?”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통합)지회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진정한 사과, 노조파괴 피해자 정찬희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원들은 한목소리로 노조파괴에 대한 삼성의 직접 사과와 피해자 원상회복을 외쳤다.

지회는 같은 자리에서 수도권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회 경기·서울·인천·충청지회와 경기·대구경북·광주전라지역 콜센터 분회는 이날 8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한 마디로 감항을 위한 사법 거래용”이라고 단언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삼성은 노조파괴로 고통받은 노동자,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삼성의 진짜 사과와 노동조합 인정, 노동삼권보장을 요구한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삼성 무노조 경영은 끈질긴 노동자 투쟁으로 깨졌다.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삼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노조탄압 책임자들이 여전히 삼성에서 승승장구하며 노조 부정, 교섭 해태 등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삼성은 노조파괴 문제 해결과 반노조 행위 중단으로 노조파괴에 관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라며 “금속노조 가입 확대와 현장 투쟁 조직으로 삼성



재벌을 비꾸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파괴 범죄자들 삼성에서 승승장구 중”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회는 ‘이재용 부회장 ○○○해야 진정한 사과 릴레이 캠페인’ 결과를 발표했다. 지회는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 지회 조합원들에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생각하는 삼성 자본의 진정한 사과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지회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삼성 자본의 진정한 사과는 ▲정찬희 해고자 복직 ▲최종범·염호석 열사에 사죄 ▲노조파괴 피해자에 직접 사과와 원상회복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노동자 직접 고용(현재 자회사 소속) ▲노동조합 인정 ▲노동삼권 실질 보장 등의 이행이라고 답변했다.

곽형수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갑자기 언론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이 흘러나왔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내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며 “노조파괴로 돌아가신 분들에 사죄하지 않고 정찬희 복직이 없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거짓이고 가짜”라고 분노했다.

윤종선 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며 저임금과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사람

답게 살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며 “결국 삼성의 노동자 무시와 불법 경영이 노동조합을 만들게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를 뺏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윤종선 지회장은 “포기 않고 투쟁해 2019년 직접 고용을 쟁취했지만, 정찬희 동지는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윤 지회장은 “올해 투쟁은 정찬희 동지가 복직할 때까지 간다”라고 결의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삼성전자서비스(통합)지회는 같은 자리에서 ‘노조파괴 피해자 정찬희 복직, 2020년 임금협약 수도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경기·서울·인천·충청지회와 경기·대구경북·광주전라지역 콜센터분회 조합원들은 하루 파업(8시간)을 벌였다. 지회 2020년 요구는 ▲정찬희 해고자 복직 ▲기본급 인상 ▲노사상생기금 마련 등이다.

정찬희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직부장은 결의대회 투쟁사를 통해 “복직을 위해 집회를 열고 선전전 1인 시위에 나서줘 고맙다. 하루빨리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수리하고 드라이버 돌리며 살고 싶다”라고 복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조합원들의 박수와 응원을 받았다.

정찬희 조직부장은 “사측이 해고자 복직 안전은 얘기조차 못 꺼내게 했지만, 지회의 꾸준한 투쟁으로 최근 사측과 네 차례 만났다”라며 “사측은 여전히 다른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태도다. 삼성 자본의 노조파괴로 억울하게 해고됐다. 복직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중 하청노동자 월급 도적 떼, 정몽준·정기선·권오갑”

2,600여 명 임금·4대 보험료 못 받아 ... 조선소, 불법 파견·계약서 미이행 등 무법천지



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건조부와 도장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21개 업체 2,600여 명의 노동자가 8월 11일 현재 105억여 원의 임금과 4대 보험료를 받지 못했다.

업체 대표들이 원청이 주는 기성금(공사대금)이 모자란다고 7월 31일 기한인 세금계산서 발행 서명을 거부해 사달이 났다. 2019년 4월 체불 사태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벌어진 일이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8월 11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대규모 임금체불 규탄, 원청책임 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중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원청과 하청으로부터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받았다고 폭로했다. 지회는 거의 매달 20~30%의 임금이 밀렸고, 불안정한 생계의 고통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됐다고 밝혔다. 노조 현중지부와 사내하청지회는 임금체불의 원인이 원청 현대중공업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와 지회는 현중이 수년째 하청업체의 4대 보험료만큼 기성금을 모자라게 줬다고 증언했다. 조합원들은 전형적인 갑질·무능 경영이라고 성토했다.

현중은 대주주 정몽준 등에 고액 배당을 주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질인 물량팀 구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지부와 지회는 현중이 생산리스크와 손실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중은 임금체불 등 문제가 터지면 업체에 ▲4대 보험료 체납 안내 ▲상생지원금 상환기한 연장 ▲영업보증금 돌려막기 ▲정부·금융권 대출 강요 등의 갑질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빚더미만 키운 업체들이 한계에 다다라 7월 3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현중은 조선소를 불법과 탈법 판치는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직접 제작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는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 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은 원청이 임금을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주기로 돼 있으나 당연히 지키지 않고 있다. 4대 보험료도 원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내기로 약속해놓고, 뒤로는 하청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

현중의 양아치 같은 행태는 이어지고 있었다. 공정거래위는 현중이 무계약 상태 하도급, 일방 하도급 대금 삭감,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증거인멸 등을 저질렀다며 2019년 12월 208억 원의 과징금 처벌을 내렸다.

노조 현중지부와 지회는 현중이 과징금 처벌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갑질 경영을 저지르고 있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노동부는 긴급히 지도·감독·행정 처벌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태일 3법’ 쟁취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

총연맹 비대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 “코로나19보다 구조조정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



“절대다수의 노동자, 민중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재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100만 민주노총은 하반기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이라는 시대 요구를 ‘전태일 3법’이라 명명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8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연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밝혔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20년 하반기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4대 기조를 중심으로 하반기 사업과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코로나 19를 빌미로 자본이 폭력적으로 자행하는 해고, 폐업, 휴업, 구조조정 등 생존권 파괴에 맞선 투쟁을 시작으로 전태일 3법 쟁취 투쟁과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지도부 선출 완수를 위해 사회가 민주노총에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보다 구조조정이라는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으로 현장을 덮치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삶터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오늘 중집에서 전국의 구조

조정 투쟁 사업장과 간부들이 참가하는 8월 26일 상경투쟁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본의 위기 앞에 왜 노동자들만 길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부에 묻고자 한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각 조직의 투쟁상황 공유와 요구사항을 알리는 발언을 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8월 2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사업과 투쟁계획을 결정한다. 8월 17일 주에 지역본부별 ‘전태일 3법 입법 발의자대회’와 8월 24일 ‘100인 입법 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전개한다.